

원데이 헌법

2017년 국외직 9급

정답표 (가 책영)

②⑤④①① ⑤③②④⑤
③④①⑤③ ③③①④②

01

②

헌법전문

02

⑤

평등권이 침해된 판례 이외 모두 합헌

03

④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 통행금지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합헌 - ('퀵서비스업' 등)직업수행의 자유 제한(X), 재산권 제한(X), 일반적 행동자유권만 제한(O)) (헌재 2011.11.24. 2011헌바51) ★★

04

①

검열에 해당 O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각 의사협회가 시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05

①

■ 헌재판례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헌법이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에게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전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전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는 이를 입법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험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각하 - 헌재 2016.04.28. 2015헌마1177)

06

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07

③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08

②

위헌정당해산제도 : 2공화국(1960년) 헌법

09

④

국민투표권이 침해된 판례(4개) 이외 모두 합헌

10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 →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可

11

③

기본권 '충돌'의 우월성을 인정 : ①교사의 수업의 자유 < 국민의 수
학권·학습권

12

④

(ㄴ) [cf] '주민투표권' → 법률상 권리(But, 평등권 심사는 헌법상 권리!!!)(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잠정적용 헌불)) → 선거권, 국민투표권,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주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조심! ★

(ㄹ) 정당과는 달리 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선거운동금지(합헌) → 그 후 단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한정적으로 열거(공선법 제87조)

13

①

■ 대법판례①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판 2008.01.24. 2007두10846)

14

⑤

■ 명확성의 원칙 : 현재판례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15

③

재산권 X : 농지개량조합의 재산

16

③

■ 현재판례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 - 현재 2003.12.18. 2003헌마225) [cf]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라크파병결정(의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재 2004.04.29. 2003헌마814)

17

③

위헌법률심판의 대상O : 관습법(ex: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 등)

18

①

■ **대법판례④** “국회의원인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실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갑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등의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대판 2014.07.24. 2012다49933)

19

④

■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의 요건상 ‘공통점’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의 심의(해제에도 要)+ 문서의 형식 +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의 승인(‘사후승인’을 의미. 수정승인可)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소급하여(X)) 효력을 상실

20

②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판례 이외 모두 합헌